

[정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확정]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에 초점

정부는 지난 7월 14일 노무현 대통령 주제로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고, 하반기 중 최저가낙찰제 적용공사를 500억원 이상 입찰자격사전심사(PQ) 대상공사로 확대하고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저가심의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의 중점을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에 두고 서민·중산층 등의 민생안정을 도모해 나가면서 금융시장 안정과 자금흐름의 개선, 도하개발아젠다(DNA)·자유무역협정(FTA) 등 대외 경제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 임기 안에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5대 실천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사회 전반이 안정되고 하반기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3% 중반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소비자물가와 실업률도 3% 내에서 안정되고 경상수지는 20억~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투자는 공공부문의 SOC 지출 확대에 따라 토목건설은 증가할 것이나 건축허가면적의 감소에

따라 건물건설이 위축되어 전반적으로 상반기보다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세제지원 등 투자여건은 좋은 상태로 기업투자심리가 안정되고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면 상반기의 부진에서 벗어나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경기가 2/4분기를 저점으로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회복 속도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투자부진으로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투자활성화에 중점을 뒀다. 경기회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금융·세제지원과 규제개선 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유도하며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과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

는 한편 대외경제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 기술혁신과 구조개혁,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균형발전 등 5대 전략을 추진하고 구조개혁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며 대외신인도를 제고시키기로 했다.

또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하반기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을 15%로 상향조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투자한 사업용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기간을 최대 50%까지 단축해 주기로 했다.

특히 추정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과 함께 하반기 중 송배전설비 등 5천억원 규모의 공공투자사업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외 풍부한 유동성을 SOC투자로 연결하기 위해 프로젝트 금융회사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내외 종합개발금융업자, 연기금, 금융기관 등의 투자유인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재무적 투자자의 민자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재무투자자 출자비율이 높은 사업시행자에 대해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완화하고 SOC 전용펀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책과 병행해 수도권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부지확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소재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제, 금융, 재정상의 지원을 확대하며 산지개발을 촉진, 낙후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전산지 내 시설설치에 대한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수도권 30만 가구를 포함해 총 50만 가구의 주택을 건설하고 매년 3% 포인트씩 부동산 보유세제의 과표현실화를 추진하면서 세율체계를 지방분권

화계획과 연계해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의 기반구축과 관련하여 정부는 7월 말까지 10개 내외의 미래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이공계 출신의 공직 진출 확대를 추진하는 등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재정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설기술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하반기 중 500억원 이상 PQ대상 공사로 확대하되 덤핑으로 인한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저가심의제 도입도 병행 추진하기로 하는 등 정부공사 입찰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담금운용평가단 주관으로 103개 부담금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정립하기로 했다.

동북아경제중심 구축을 위해서는 하반기 중 인천·부산·광양 3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동북아 물류중심 구현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자립형 지방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며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연내 수립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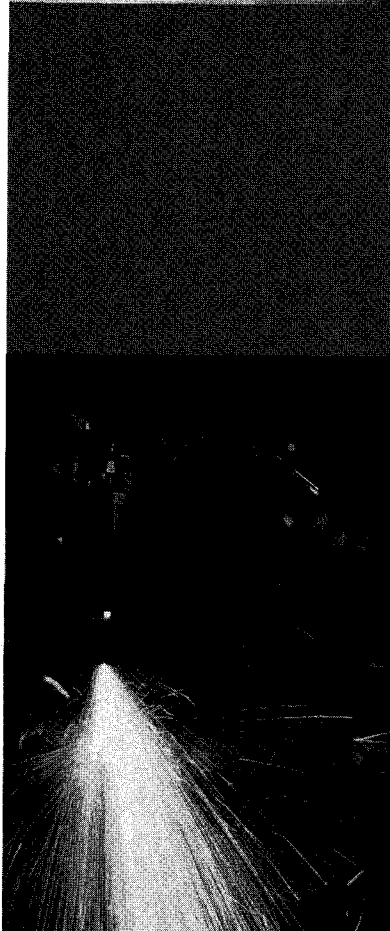
■ 하반기 주요정책과제

○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

△ 추경 집행과 공공기관 투자확대 : 추경은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지원과 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 예산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집행특별점검단을 통해 집행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하반기 중 송배전설비, 수자원개발, 산업단지공사, 영산강 대단위 개발 등 5천억원 규모의 투자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소요 재원은 자체 보유자금을 활용하되 필요할 경우 제정(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기금차입을 통해 지원한다.

△ 민간투자유치제도 개선 : 종합사업관리능력을 갖춘 프로젝트회사(SPC)의 설립을 가능하도록 해 사업시행자간 경쟁을 촉진시킨다. “프로젝트 금융회사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내의 종합개발금융업자, 연기금, 금융기관 등이 프로젝트 회사에 적극 참여토록 이중과세 방지와 금융기관 등의 출자제한에 대한 예외인정 등 투자 유인장치를 마련한다. 또 재무적 투자자의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촉진시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SOC투자로 연결시키기 위해 사업제안서를 평가할 때 재무투자자 배점을 1%에서 5%로 높이고 재무투자자 출자비중이 50% 이상인 사업시행자에 대해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완화한다. 이럴 경우 후순위채 발행이 가능해져 건설기간 중에도 재무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함



께 SOC 전용펀드의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토록 하는 등 SOC 전용펀드의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토록 하는 등 SOC 전용펀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한다. 특히 내년도 연기금의 SOC 투자규모를 늘려 기존의 SOC 전용펀드에 대한 출자를 확대하고 자체 전용펀드 설립도 추진한다.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 사업제안 단계에서 국내외 경쟁을 촉진하고 총사업비의 합리적 결정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입찰 경쟁이 가능하도록 대형사업을 적정규모로 분할, 단위사업화하고 상위평가 탈락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업제안비용 일부(3분의 1 수준)를 보상한다. 또 사업제안서에 대한 정부의 총사업비 예측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제안서 제출시 요구하는 설계수준을 하향 축소하는 한편 조감청 등 전문기관에 의한 총사업비 심사를 강화하고 통행량 추정 of 객관성 확보를 위해 통행량 추정 실명제를 도입한다.

△ 기업투자관련 세제지원 강화 :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기 위해 연내 조특법을 개정한다. 기업

의 부진한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투자분에 대해 공제율을 상향조정해 투자기업들에게 약 2천억원의 세금을 경감시킨다. 또 기업의 설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올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투자한 사업용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기간을 최대 50%(중전 25%)까지 단축시켜 준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과 국제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연구개발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한해 최저한세를 적용을 배제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3년간, 대기업은 석·박사급 연구원 인건비에 대하여 3년간 최저한세를 적용을 배제한다.

△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 다국적기업의 국내 유치를 위해 외국기업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대폭 경감하고 과세방법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유치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외국인 CEO 등에 대해 총급여액에 일정률(예 : 18%)을 적용해 과세 종결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다기화 되어 있는 외국인 투자 입지지역으로 일원화하여 허용업종을 물류업, 제조업, 수출입 목적 도매업 등으로 확대하고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정 지역의 외국인 투자금액 합계가 5천만 달러 이상이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현재는 1개 기업투자가 5천만 달러 이상)하는 등 외국인 투자지역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입주가 활발한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확대를 추진하고 군산, 대불, 마산 등 신규·추가지정 된 자유무역지역의 토지매입과 부지조성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필요한 부지 확보를 적극 추진한다. 관세자유지역 부지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외환제도·교육·출입국절차 등 외국인 경

영·생활환경을 개선한다. 투자금액이 1천만 달러 이상인 외투기업과 해외본사간 상계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리절차를 간소화한다. 특히 각 부처에 외국인투자전담조직을 운영하여 부처별 전략분야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신고된 외국인투자는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경쟁국과 차별화 되는 우리의 강점을 집중 홍보하고 단점은 인센티브를 통해 보완할 수 있는 투자전략을 수립한다.

△ **수도권 규제 합리화·지방이전 지원 확대**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책과 병행,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와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수도권 입지규제를 합리화한다. 국내·외국기업, 대·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수도권의 공장 난립을 막기 위해 공장 총량제와 산업단지 공급제도를 유기적으로 연재하기로 하고 전체 공장 건축량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공장 총량제 물량을 산업단지 공급량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시 법인세 등 세제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의 소재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서 전체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등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한다. 또 산은에 1천억원을 출자하고 이를 기반으로 3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저리자금을 공급하며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업체당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는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수도권에 3년 이상 소재할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할 경우 중앙정부가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신설한다. 중앙정부 분담비율은 해당지역의 개발정도에 따라 차등화 한다. 이밖에 지방이전기업이 부지를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기존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한다.

△ 산지개발 촉진을 통한 낙후지역 활성화 : 연료 사용량이 연간 200톤, 폐수배출량이 1일 50m³ 이상인 사업장 등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은 보전산지 내 입지를 제한하고 축산시설은 3만m²에서 1만m²로, 창고는 1만m²에서 3천m²로 면적제한을 강화하는 등 보전산지 내 시설설치에 대한 규제를 개선한다. 병원·사회복지시설·농어촌휴양시설(현재 1만m²까지만 허용) 등은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1만m² 이상도 설치를 허용한다. 또 주 5일 근무제 등으로 증가하는 국민의 야외휴양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자연휴양림 조성 등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휴양림 면적제한 기준을 국가나 지자체가 조성할 경우 50ha 이상에서 30ha 이상으로 완화하고 민간이 조성할 때는 30ha 이상에서 20ha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국·공유림을 이용한 민간의 자연휴양림 조성을 제도화하고 사업비 용자지원 조건개선, 휴양림 조성시 사전용자를 허용하는 등 민간의 휴양림 조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 중소기업이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보증공급 확대 등 원활한 자금조달여건을 조성하고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창업활성화를 위한 “창업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판로 확대를 위해 해외 조달시장과 대형유통업체로의 진출 지원, 공공구매 이행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신용보증보험의 기술평가 전문인력을 확충하며 대학

내 산학연 협력조직을 “중소기업 협력단”으로 통합·운영한다. 벤처기업의 M&A를 활성화해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합병시 미공개 기업의 코스닥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합병 및 신규등록시 최대 주주, 임원 등의 일부 지분변동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주식교환시 양도소득세 등 세부담을 완화하며 연말까지 “중소기업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 금융시장의 안정과 자금흐름 개선

자금흐름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증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중장기적 수요기반을 확충한다. 또 배당증시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이 배당할 수 있는 횟수를 확대하는 등 배당절차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연기금의 자산운용체계가 전문화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자금조달구조를 장기화해 안정적인 자금흐름체계를 구축하며 단기금융시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를 개선하여 부동산 유통화를 촉진키로 하고 최저자본금 설립요건을 5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인하하며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범위를 확대하는 등 설립·운영상의 제한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부동산투자 회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지원과 관련하여 신용불량자별 특성을 감안해 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함으로써 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또 은행의 민영화와 제2금융권 구조조정을 꾸준



히 추진하고 방카슈랑스를 계획대로 8월부터 도입한다.

○서민·중산층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

△고용안정 지원과 서민생활 보호 :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인력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 여성과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장기구직자 고용장려금 지급기안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대상 및 지원을 확대하고 소규모 건설공사 등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고용·산재보험 운영을 내실화하며 산업재해 감소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하반기 중 시행한다. 특히 근로자 재산형성과 노후생활지원을 위해 퇴직연금 관련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근로소득 공제율 확대 등 세부담 경감을 추진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서민주거안정 지원 : 올해 안에 수도권 30만 가구를 포함하여 총 50만 가구의 주택을 건설한다. 이를 위해 판교 개발계획을 연내 수립하고 영덕~양재 고속도로와 신분당선 민자유치계획을 7월 중 확정한다. 또 국민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 추경에서 1천억원을 지원하는 등 재정 지원규모를 7천 425억원으로 확대하고 국민임대주택특별법(안)의 재입법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한다. 특히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유세제를 개편키로 하고 매년 3% 포인트씩 부동산 보유세제의 과표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세율체계를 조정한다. 중산서민가계의 세부담은 늘리지 않고 부동산 과다보유자의 세부담은 부동산 보유규모에 따라 누진 중과하는 방향으로 세율을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지방제정

과 수입원인 재산제세를 지방분권화 계획과 연계하여 전면 개편한다. 이를 위해 행자부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하반기 중 최종 방안을 확정한다. 또 부동산 매매시 중개업소에서 인터넷 등으로 시·군·구청에 부동산거래내역(검인계약서)를 신고토록 제도화하는 등 부동산 실거래가액 파악을 위한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고 부동산 실거래가액의 실질검사를 위해 계약서 검인제도를 개선한다.

○대외경제환경 변화 능동대처

WTO 각료회의 등 협상 진전을 봐가며 DDA협상의 분야별 목표와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서비스 양자협상에 대비해 분야별 협상전략과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 칠레와의 FTA 국회 비준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FTA 이행특별법을 제정하며 일본, 싱가포르, 멕시코 및 동남아국가연합(ASEAN) 등 다수국가와 동시에 FTA를 추진한다.

또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논 편입비율을 폐지하고 대기업에 대한 단지조성비 지원을 확대하며 농촌관광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마을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농특혜 연장 등을 통해 복지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남북경협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건설, 금강산 관광 등 핵심경협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한다.

이와 함께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 참여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민관합동으로 SOC, IT산업 등 대미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하며 민간경험 채널을 활성화해 상호 이해관계를 제고하고 한·미 BIT협상이 재개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 노력을 강화한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기반 구축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중장기 국가비전으로 설정하여 기술혁신과 경쟁 촉진을 통한 고부가가치 경제를 추구하고 미래 지향적·혁신 지향적 사고와 사회 분위기를 확산·정착시키며 세계화의 관점에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한다. 기술혁신, 구조개혁, 노사개혁,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균형발전을 5대 실천전략으로 삼아 참여정부 임기 중 2만 달러 시대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한다.

△기술혁신 : IT, BT, NT, ET, MT 등 신기술 및 융합기술(NT, BT, IT융합)개발과 산업화를 추진하고 전통산업과 신기술의 접목을 촉진시킨다.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등 173개의 기술·품목을 대상으로 7월 말 10개 내외의 미래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전자정부로드맵” 작성, 전자상거래, 교통정보시스템 등 국가사회정보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지원하고 초고속인터넷망(2Mbps)을 광대역통합망(50~100Mbps)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또 핵심 환경기술개발과 상용화를 통한 환경산업의 수출경쟁력 제

고와 해양과학기술(MT)의 실용화를 추진하며 “나노종합Fab센터” 등 첨단 연구인프라의 확충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석·박사 병역특혜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5년에서 3년 10개월로 단축하는 등 우수한 인력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하며 이공계 전공자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고 기능인에 대한 우대시책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식 기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금융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시장개혁 추진 : 연말까지 “시장개혁 3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한다는 목표 아래 9월 말까지 시장의 투명성 등에 대한 평가자료를 개발하고 출자총액 제한의 중장기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또 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채비율 등 요건의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유예기간 안정범위도 확대하며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 방안과 손해배상 청구 활성화 방안을 8월 말까지 마련한다. 이와 함께 상시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누적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실시하고 부실 징후기업(69개사)과 정리대상기업(217개사)의 사후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현재 10개사인 워크아웃기업의 워크아웃 절차를 연말까지 마무리한다.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을 뒷받침할 국가 재정운용계획(2004~2006)을 수립하고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며 국가재정운용 관련 법체계를 정비 및 재정용자사업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운영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건설기술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공사 입찰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최저가낙찰 대상을 하반기 중 500억 원 이상 PQ대상공사로 확대하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저가심의제도를 이와 병행해 도입한다. 이와 함께 건설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탄키와 대한입찰제도를 개선하고 설계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시킨다. 기금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며 여유가 있는 기금재원 중 일부를 관련 유사 사업에 폭넓게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또 부담금 등 준조세를 정비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부담금 운용평가단 주관으로 103개 부담금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국민임대주택건설과 대체에너지 개발 시설 등 공공목적의 산림이용에 대한 대체자원조성비의 감면을 추진하고 행정요금과 행정제재금 등의 준조세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부과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전면 재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한국전력의 경우 5개 발전자회사의 민영화를 지속 추진하고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도입·도매 부문에 대해 분할방식과 신규진입방식 등을 신중히 검토해 구조개혁을 추진하며 내년 1월 철도시설공단 출범을 차질 없이 준비한다.

△ **노사개혁** : 노사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 해결토록 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한다. 노사정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실효성 제고를 통한 노·사·정 협의 문화의 정착을 추진하고 노사관계 법·제도와 의식·관행을 국제기준과 우리 현실에 맞게 선진화하는 “노사관계개혁방안”을 8월 중 마련해 노사정위의 논의 등을 거쳐 확정·추진한다. 또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를 통해 10월까지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 요구 등 불합리한 관행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정리하고 실행상의 애로와 제도적 문제점을 점검하여 개선방

안을 강구하고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제도와 병행 실시하는 방향으로 도입을 추진하며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동북아 경제중심** : 하반기 중 인천·부산·광양 3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경제자유구역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해 단계별·지역별로 개발계획과 투자유치전략을 마련한다. 동북아 물류중심 구현을 위해 부산신항·광양항의 항만시설 확충과 배후 물류단지 조성을 본격 추진하고 해운항만 물류정보센터(IDC)를 구축한다. 동북아 연구개발(R&D)·금융 허브 기반 조성을 위해 다국적 기업의 동북아 진출전략을 분석하고 R&D·물류센터 등 거점형 투자 유치에 주력한다. 또 금융통합화 추세에 맞게 금융법 체제를 기능별로 개편하고 금융·외환부문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게 선진화한다.

△ **국가 균형발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특별회계를 설치, 자립형 지방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산·학·연·관 네트워크 활성화와 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등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해 지방경제를 혁신주도 경제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비수도권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고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과 함께 공공기관의 수도권 내 청사 신축·매입을 금지, 입지 제한 강화로 지방 이전을 촉진한다.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발전(win-win)할 수 있는 토대 구축을 위해 지방을 우선적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시책을 “집중억제”에서 “계획적 관리”로 전환, 수도권에 대한 과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제도를 개선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규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